

# 소주성 시즌2로는 경제 못 살린다

(소득 주도 성장)

## 경제포커스

### 나지홍

경제부장



30년 넘게 거시경제와 금융을 담당했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올린 ‘세수 착시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라는 글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세 수입은 2022년 395.9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년 연속 감소는 전례 없는 일 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뒤집어 썼다.

김 전 차관의 분석은 달랐다. 1980년부터 장기 추세와 비교하니 최근 2년간 세수가 정상적인 수준이고, 오히려 2021년(+58.6조원)과 2022년(+51.8조원) 급증이 비정상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부동산·주식시장 과열과 수출 호조, 풍부한 유동성이 어우러진 일시적 특수였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일시적 비정상을 새로운 정상으로 착각했다는 데 있다. 일시적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흐름으로 오인하고 매년 씹씹이를 크게 늘렸으니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넉넉한 나라 살림을 물려받고 출

범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두 차례 연 말정산 파동을 겪으며 비과세·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으로 세입 기반을 넓힌 덕을 문 정부가 누린 것이다. 2013년 201.9조원이던 국세 수입은 2017년 문 정부 첫해엔 265.4조원으로 경종 뛰었고, 2022년엔 395.9조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런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악화됐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영터리 경제 이론에 집착해 돈을 흥청망청 썼기 때문이다. 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 채무만 400조원을 넘는다. 김대중(+73.5조원), 노무현(+165.4조원),

재정 풀어 경제 순환시킨다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 文 정부 소득 주도 성장과 유사한反시장 정책이 선의로 포장돼

이명박(+143.9조원), 박근혜(+183.8조원) 등 과거 어떤 정부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다.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소비가 늘면 기업 투자가 늘고, 고용이 확대되어 다시 소득이 증가한다는 식이다. 이론상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소득이 늘어나는 방식이 중요하다. 경제학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취업이나 승진 등을 통해 앞으로 소득이 계속 증가할 경우 소비가 늘지만, 일회성 소득은 소비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문 정부가 코로나 시기 지극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이 일시적 이라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저축하거나 빚을 갚을 뿐이다. 반면 투자가 늘어나 고용이 창출되면 안정적인 소득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비로소 소비 여력이 생긴다. 경제 정책의 출발점을 소득이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하는 이유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이른바 ‘호텔경제론’도 마찬가지다. 10만원 예약금이 가구점, 치킨집, 문방구 등을 거쳐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구조를 두고 그는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했다. 그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호텔경제론을 기본소득·지역화폐와 연결했었다. 결국 정부 재정을 풀어 국민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인데, 소주성 시즌2나 다름없다.

경제학계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은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오류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의로 포장된 정책일수록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반(反)시장적일 수 있으니 결과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터리 이론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건강한 경제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유백색의 유충인 애벌레의 크기는 성충보다 조금 큰 6~7cm 정도인데, 2년에서 3년 정도의 유충기를 지낸다. 비단벌레는 성충이 되어 교미 후 암컷은 한 달 동안 살면서 3~4회 정도의 산란을 하고는 죽는다. 수컷은 석 달가량을 성충으로 산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다는데, 비단벌레는 역사를 품은 유물로도,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우리 곁에 있다. 그 아름다움을 한 땀 한 땀 껴어준 손길과 비단벌레 날개의 영롱한 빛에 애벌레의 꿈도 상상해 본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자연유산위원

윤주의 이제는 국가유산 [28]

## 이토록 아름다운 벌레, 비단벌레

고운 모습에 비단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영롱한 초록빛이 ‘보석벌레’가 더 어울릴 것 같다. 바로 ‘비단벌레’다. 우리나라 고유종이라 학명이 라틴어로 한국을 뜻하는 단어 ‘coreana’가 들어간 ‘Chrysochroa coreana’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가장 아름다운 딱정벌레 중 하나다.

딱정벌레류의 비단벌레를 북한에서는 구슬벌레라 하고 영어로는 주얼 비틀(Jewel beetle)이라 한다. 그 모습 때문인지 비단벌레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석 대접을 받으며 공예 곤충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황남대총, 금관총 등에서 허리띠나 말갈춤(마구, 말안장 발걸이 등 일체)에 유물 장식으로 발견됐다.

최근에는 금관과 금동관에 비단벌레 날개가 장식으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신라 금관을 영롱하게 장식했을 비단벌레는 1500여년의 시간을 지나며 대부분 검게 색이 변하고 바랜 상태였다. 그럼에도 거꾸로 된 하트 모양에 초록빛 흔적을 남겨 놓았다.

비단벌레는 크기가 3~5cm 정도다. 유선형 몸은 짙은 청록색 금속 광택이 나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진자쫂빛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비단벌레의 모습을 야생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다. 썩은 나무의 굽은 줄기나 죽어가는 반고사목을 선호한다. 주로 팽나무, 서어나무, 참나무류 등에 알을 낳고 7월에서 8월 말은 날에 나무 위를 날아다닌다.



\*영상 QR코드

## 社 説

### 李 4대강 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강·영산강보(狀) 해체 취소 결정을 원상대로 돌리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추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권 4대강 보 해체·개방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결정했다.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였다. 수천억 원씩을 들여 건설한 홍수·가뭄 방지용 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국민 세금으로 부수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발상이었다.

당시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 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하고 의견이 다른 전문가는 모두 배제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보 상시 개방으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불리한 실측치 대신 ‘보 건설 전 수질’을 평가 기준치로 삼았다. 자기편 사람들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성도 사실상 조작한 것이다. 보 주변 농민들이 “농업 용수가 고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세종·공주·나주시 의회

등도 반대했지만 문 정부는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2023년 문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개방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4대강 보는 2년여 만에 겨우 원상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일고 세금 3500억원이 낭비됐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정치적·이념적으로 밀어붙이다 실패한 문 정부의 억지 정책을 답습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고 가뭄도 잦다.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댐·제방·보 건설과 강 준설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폭우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 농업·생활용수 공급으로 가뭄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수질까지 개선됐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반면 환경 단체 등의 반대로 제방 건설과 준설이 안 된 충북 미호천 등 4대강 지천에선 큰 피해가 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키운 4대강 보 해체와 수문 전면 개방을 재추진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겠다는 이 후보 뜻과도 맞지 않는다. 철 지난 진영 논리와 이념에 갇혀선 안 된다. 이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재고하기 바란다.

### “동해엔 러시아, 서해엔 중국 있다” 이게 미국 시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에서 “한반도에서 동해를 보면 러시아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있고 서해를 보면 중국의 북방한계선(NLL) 주변 침범이 있다”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한 미군을 불박이로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동 배치하려는 배경엔 중·러의 도전이 있으며, 이는 한국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북한 도발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군이 주로 맡아야 하고 미군은 중·러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에서 얼마 전부터 자주 나오고 있는 얘기다.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해 한국은 무슨 대응책을 갖고 있느냐다. 당장은 중·러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한반도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중국은 그런 준비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금 우리는 전간기(전쟁과 전쟁 사이의 기간)에 있다. 전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국가와 군은 그 시대의 작전 환경과 현실에 대응하기 적합한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이런 전간기에 한다”고 말했다. 유비무환이란 뜻이고, 한·미군이 북·중·러의 위협에 대비해 전략과 전술을 바꾸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안보 공약엔 세계 정세,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5년 전 누군가 ‘앞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포탄과 병력이 모자라 북한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면 황당하게 들렸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 것이 국제 정치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여기에 한반도가 휩쓸려 들어가는 일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략(戰域)’으로 통합해 함께 중국을 견제하자는 구상을 미국, 필리핀, 인도 등에 설명했다고 한다. 일본은 자국 국익에 맞는 나름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국익을 잃을지 모른다. 한반도 주변 정세를 폭넓게 살피면서 우리의 책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 ‘정년 연장’보다 ‘계속 고용’이 일자리 상생 해법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더 일한 사람(고령자 계속 고용)이 지난해 7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 늘었고,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2016년과 비교하면 두 배로 증가했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정년을 넘겼어도 필요한 인력이라면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는 수명이 길어진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급 기간까지 소득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일하기를 희망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이나 중소기업 등도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양쪽 모두 윈-윈 하는 해법이다.

민주당 공약은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이다.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 는 필요하지 않은 인력까지 떠안게 돼 부담이 커진다.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고, 청년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진다. 기업들 스스로 ‘계속 고

용’을 선택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65세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았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가운데 하나를 기업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

연금이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하지만 ‘일하는 60대’ 35%는 저임금 단순 노무직이다. 영세 자영업도 많다.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고령 자영업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경쟁은 치열하고 소득은 적은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노인 빈곤 확대와 부채 위기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하는 60대’가 당면해진 만큼 기업에도,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60대 임금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 일괄 정년 연장 대신 ‘계속 고용’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선(善)과 악(惡)》의 싸움, 《의(義)와 불의(不義)》의 싸움

# 지금은 《도덕적 지도력》… 다보스포럼의 선택

지도자 자질론, 《도덕적 논쟁》 불붙다

《좋은 X 착한 X 옳은 X》vs 《옳은 X 나쁜 X 고얀 X》  
《정의의 총잡이》vs 《황야의 무법자》



▲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는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모님 노예였다”고 토론했다. © 정성윤 기자

### 지금의 한국 내전(內戰)

지금의 한국 내전(內戰)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인가? 좌·우 싸움인가? 공익 제보자 조명현은 5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경기도청 공무원 때 《사모님 팀》에서 일했다. 도청 법원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일제 삼푸 등을 사서 그 집 앞에 매일같이 대령했다. 공무원인데도 《개인적 노예 짓》을 했다고 그는 자탄했다. 어떤 이는 “과일 2791만원어치는 무게로 2.8톤, 집에 코끼리를 키우냐?”고 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저항은 따라서, 좌·우 싸움싸움이기 전에 《선(善)과 악(惡)》의 싸움, 《의(義)와 불의(不義)》의 싸움이란 이야기다.

### 윤여준(유용성) vs 조명현(도덕성)

5월 27일의 대통령 후보 3차 토론회 역시 《도덕적 논쟁》으로 흘렀다. “인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그토록 나쁜 캐릭터가 지도자 잡힐 수 있느냐?”는 질타였다.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능력인가 도덕성인가? 보수 원로 인사라며 민주당 선거캠프 좌장이 된 윤여준은 5월 13일 이렇게 주장했다.

“오늘의 비상사국엔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유용성이 더 중요하다.”  
“나라 형편이 어려울 땐 국정 효율성을 살릴 능력이 있어

야 한다.”

지도자의 부도덕성을 직접 겪고 폭로한 조명현 제보자와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세계적으로는 이 논쟁은 어떻게 결론 났던가?

### 《세계경제포럼》은 선언했다

2021년 2월 19일 열린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내놓은 보고서는 이렇게 선언했다.

- ① 도덕적 지도력에 대한 수요(需要)는 높는데 공급은 낮다.
- ② 도덕적 지도력이 높은 임원이 동료들과 더 잘 계속한다.
- ③ 도덕적 지도력이 있어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당연한 소리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구현되지 않기에, 이런 당연한 소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오늘의 한국 정치 역시 이 당연한 소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 어떤 선거구 출마자는 예컨대, 도덕적으로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렸는데도 《충실한 우리 편》으로 보였든지 거론히 금배지를 달았다.

### 이기기만 하면 악당이라도 좋다?

《좋은 X 착한 X 옳은 X》보다, 《옳은 X 나쁜 X 고얀 X》이라도 《유용하면 강행》이란 풍조, 서부활극과는 정반대다. 악당이 이긴다.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그러나 《이기기만 하면 악당이라도 좋다》①는 삶의 방식은 《강력한 역풍 ②》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① ② 지지율은 4~5% 오차범위 내 차이 정도로 바짝 좁혀졌을지도 모르기에.

1970년대 운동권은 《선(善)과 악(惡)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물었다. 2025년엔 자유인들이 타락한 운동권들에게 물어야 한다.

“《정의의 총잡이》와 《코끼리 기르는 짓가락》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텐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5월 28일 게재 되었습니다.